

POLITICS 민주, 진영·계파 초월 '용광로 선대위' 꾸린다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오늘 인선 발표...보수진영 추가 영입 가능성

김동연·김경수·박용진·우상호 등 비명계 타진

윤여준 "제일 가능성...좋은 대통령 되게 노력"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30일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진영과 계파를 불문하고 폭넓게 인사를 기용하는 '용광로 캠프'가 될 전망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최고위원회의 중심의 당 지도체계 선대위로 전환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된다.

선대위 구성의 초점은 통합이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

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에서 항상 최우선은 경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으로,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경제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돕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냐. 제일 당선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에 앉힌 것은 추가로 중도·보수 진영 인사

들을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우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권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나. 제일 당선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내 비명계나 이 후보의 경선 상대들도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가능한 선대위에 함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후보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의원을 조만간 직접 만나 경선의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은 물론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라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고, 두

전직 총리의 예우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주 초 선대위에 "혁신당 의원과 당원이 타 정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참여가 가능하냐"는 질의서를 보냈고, 선대위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 국회의원도 당원의 타당 선거대책기구 참여는 공식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선대위가 이처럼 '개별 의원 차원에서 합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원내 12석의 혁신당은 민주당 선대위에 어떤 방식으로 합류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발언하는 박찬대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균형발전 중심축 지원”

조인철 “특구, 성장거점으로 키워야”...국회서 포럼 출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29일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융합발전포럼’ 출범식에서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뒤흔을 엔진이다.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이하 포럼)’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

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온 조 의원은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세계 각



면 입법을 추진하는 등 특구가 활성화 되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이어왔다.

조 의원은 도심융합 특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특구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청년의 기회를 키우는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철민(대전 동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박성민(울산 중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안효태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봉철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 김준영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오 기자

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중심광장 내달 1일부터 개방

주민 생활 편의 증진·정주 여건 개선 등 기대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The walkable city 완결판이자 도시 속 개방된 장소인 중심광장을 오는 5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중심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의 공원순길과 경관물길에 연결되는 오룡지구 중심공간으로, 당초 전체 사업준공 시점인 2026년 말 개방이 예정돼 있었으나, 주민편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전격 개방을 결정했다.

광장 개방으로 입주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연속성 있는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단절됐던 경관물길과 공

원순길이 연결되면서 당초 계획한 차도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등 하룻길을 조기 구현하게 됐다.

개방된 광장은 단순한 통행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장 내에서는 소규모 모임, 야외 피트니스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며,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 사업의 긴 여정을 마무

리하는 핵심 주거지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중심광장 후속으로 노을광장 등 다양한 공간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심광장의 개방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룡지구는 주거, 교육 특화도시 뿐 아니라 중심광장 인근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향후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사업 마무리 단계인 수반공원은 노을광장 조성 등 특화된 기반시설로 단장해 2026년 말 주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광주 명예시민됐다

5·18 당시 무전기 감청·기자회견 통역...내달 14일 수여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사진)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광주의 위상을 높인 내·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명예시민 선정은 공적 검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광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

암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머물며 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시민군으로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기 감청 임무를 수행하고, 윤상원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낸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항쟁 이후에도 1981년까지 미군기지 강사로 근무하며 광주와 한국의 민주화운동 상황을 미국에 알렸고, 유엔인권이사회에 광주 목격담을 담은 인권 침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미국 내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할



등에 참여했으며, 1985년 전두환 미국 방문 반대 시위, 1990년 광주항쟁 10주년 하버드대 추모 강연 등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월 당사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5월 14일 전일빌딩245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중·인: 국경을 넘어’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강기정 시장이 직접 수여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

서삼석 “농진청 홈페이지 해킹 피해대책 미흡”

비밀번호 변경 5.3% 그쳐...개인정보 노출 우려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에 도입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A업체에 발주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으

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계정 8381개 중 37%인 3132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유출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5.3%인 1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비밀번호 교체율은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은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밝히며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해오다 정보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해킹 사실을 전달한 것은 사고 11일 이후인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으



이다.

최근 사이버 침해로 인한 민간기업이 4일이 지난 뒤 문자를 송부 사례와 대조적 이다.

농촌진흥청은 서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야 조치를 취했다. 지난 21일부터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안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94%의 미변경 계정은 사이버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응은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치고 있다”며 “비밀번호 미 변경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안내로 농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한우산업 글로벌 경쟁력·농가 안정적 수익”

문금주 발의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 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수익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앙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 한우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문 의원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한우 농가와 함께 한우법 제정을 약속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한우업계의 수익사업 해결과 한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